



출판진흥기구 설립 공청회

출판진흥기구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이창경 신구대학 교수의 사회로 부길만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가 '출판산업의 실태 및 출판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이 '출판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으며, 이어 박영률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이용준 대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안찬수 (재)책임는 사회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중호 북센 미래산업 본부장,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발제 내용과 본지 유창준 국장의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한국 출판산업의 진단 및 출판진흥 정책의 방향

부길만(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

한국에서 출판은 항시 위기로 불황이라고 한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현실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기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한국 출판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출판산업의 강점은 △우리의 문화 선호 사상과 찬란한 출판문화 전통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문화의식이 강한 출판인들이 많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의 출판진흥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약점으로는 △국민 독서력의 약화 △콘텐츠 생산능력의 저하 △출판 유통의 현대화가 매우 낮은 수준 △출판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 △출판 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미흡 △출판산업의 진흥을 추진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출판진흥 정책의 방향

한국 출판진흥 정책은 아직도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있었던 생색내기 차원의 미미한 양서 출판 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와 억압의 기제로 작용했던 심의 기구가 잔존한 가운데, 국가 예산이 커다란 비중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면, 출판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위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는 일, 곧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한국 출판산업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길, 출판진흥의 성과를 계속 키우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한국 출판진흥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 독서력과 출판 콘텐츠 생산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출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급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넷째, 출판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섯째, 출판 진흥을 담당할 주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맺음말

한국 출판산업의 진단에서는 출판 위기라는 현실의 강조보다

는 우리 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의 문화적 잠재력을 끌어 올리며, 출판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출판산업의 강점으로 한국인의 문화 선호 사상과 출판문화의 전통,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성, 높은 교육 수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 문화의식을 지닌 적극적인 출판인들, 출판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약점으로는 국민 독서력의 약화, 출판 콘텐츠 생산능력의 저하, 미약한 출판유통 현대화, 취약한 국제 경쟁력, 출판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의 미흡, 출판진흥 정책의 추진 기구 미비 등을 들었다.

결국 현재의 출판산업은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지만, 과거의 출판문화 전통과 현재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교육과 출판인들의 강한 의지 속에서 미래 출판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출판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문화와 정보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출판산업에 대한 발전의 지는 선진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출판진흥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담당자들의 출판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그에 따라 출판 진흥을 위한 예산이 보잘것없는 수준이라는 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잔재인 심의 기구를 위한 조직과 재정 지원이 출판진흥법의 규정에도 남아 있고, 출판진흥정책 예산에서도 매우 큰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출판진흥 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국민 독서력과 출판 콘텐츠 생산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출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능한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넷째, 출판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출판 진흥을 담당할 주체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이 제안의 실천은 출판진흥을 담당할 법정기구의 설립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판진흥 주체의 확립은 현재의 출판진흥 정책을 한 차원 높여 한국 출판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최우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출판산업 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출판진흥기구의 설립방향 및 개요

출판진흥기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이자 국가사회의 책무인 출판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하여 출판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수요)-콘텐츠 개발-산업의 경쟁력-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진흥기구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명칭 : 한국출판산업진흥원(가칭)
- ▶ 법인 성격 : 특수법인(재단법인)
- ▶ 법적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설립근거 및 절차 규정
- ▶ 주요 기능
 - 출판산업 기반정비 : 구조개혁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제 확립, 새로운 마케팅기법의 개발
 - 출판활동의 장려와 지원 : 양적 성장, 질적 고도화
 - 출판문화향수기회의 확대 : 독서습관 증진, 독서환경 정비
 - 출판문화자원의 육성과 보호 : 저술인력의 발굴 및 저술의욕 고취, 출판문화전통의 발양
 - 세계화, 국제화 촉진 : 해외시장 개척, 국가 간 출판협력
 - 인재양성 : 출판 전문인력 양성, 출판전문 인력의 정예화(재훈련)
 - 양서권장을 위한 출판물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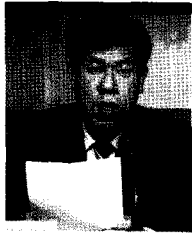
출판진흥기구의 기능

출판진흥기구 설립은 출판계에서 먼저 의제를 개발하여 왔으며,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한편에서는 출판진흥기구가 다른 진흥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과 대상은 공급자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한 정책과 전략이 공급자의 가치보다는 소비자와 국민의 가치와 관점에서 접근하고, 궁극적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 재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러한 가치의 증명을 통해서 지지가 확대되고 다시 정책과 재정이 확대되며, 공급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즉, 소비자에게 직접 관여되는 유통의 문제는 소비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출판사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운영 지원 보다는 역량, 인력, 콘텐츠 개발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출판진흥기구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여 보면, 출판산업 기반정비(구조개혁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제 확립, 새로운 마케팅 기법의 개발), 출판활동의 장려와 지원(양적 성장, 질적 고도화), 출판문화향수기회의 확대(독서습관 증진, 독서환경 정비), 출판문화자원의 육성과 보호(저술인력의 발굴 및 저술의욕 고취, 출판문화전통의 고양), 세계화, 국제화 촉진(해외시장 개척, 국가 간 출판협력), 인력양성(출판전문인력 양성, 출판전문 인력의 재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판진흥기구는 효율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체제 구축, 네트워크의 중심, 기반조성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요확대를 위한 사업은 직접적인 교육이나 캠페인 보다는 독서진흥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계하는 방식, 학교·언론·문화시설·출판사·작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각 단체들의 지원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사업 보다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기반 조성,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판진흥기구의 사업방향은 산업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지원의 관점에서 진흥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성공을 위한 Killer Contents의 육성, 우수하고 창의적인 저작물과 저작자의 활성화, 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One Source-Multi Use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 민간역량의 강화에 따른 효율성, 시장의 중시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고, 기본적으로 투자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보조금이나 융자형식은 보조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투자형식은 출판진흥기관이나 지원을 받는 측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재원을 다시 투자재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데 장점이 있으며, 출판문화진흥을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원칙에 적합), 우수한 저작물, 진입장벽의 완화, 독서의 진흥 등 기본적으로 시장실패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보조금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판인쇄진흥기구’가 되어야 한다

유창준(대한인쇄문화협회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

출판진흥기구 설립은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에 의해 논의돼 왔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발제 내용에 이의가 없다. 다만 인쇄와 출판은 바늘과 실의 관계이고 공존공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발제 내용에 아쉬움을 갖는다. 인쇄 분야의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출판과 인쇄는 어느 한쪽만 발전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본 기구의 명칭부터 ‘출판인쇄진흥기구’로 바꾸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명칭은 출판진흥기구로 하고 내용에 인쇄분야를 담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래서도 안 된다. 인쇄는 출판의 종속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 규모와 수출 규모를 보면 인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자가 개발되어 출판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역사를 감안하면 진흥기구의 명칭을 ‘인쇄출판진흥기구’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인쇄문화산업 현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1인 이상 인쇄사업체 수는 1만7767개 사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는 7만5231명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생산한 연간 매출액은 8조9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출판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2조6천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인쇄기는 총 9169대로 1도 인쇄기가 4204대로 가장 많으며 4도 인쇄기는 1138대이다. 한편 2008년의 인쇄물 수출은 전년보다 18.9% 늘어난 2억5,004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2.6% 증가한 3억6352만 달러를 나타냈다.

인쇄기자재 수출은 15억4388만 달러로 전년보다 8.1%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7억3445만 달러로 3.2% 감소했다. 인쇄기가 16억3628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쇄업계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쇄문화산업은 그 규모나 수출전위 산업 및 지식산업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문화산업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1만7,767개 업체 중 10인 이상 업체가 7.9%에 불과할 만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생산시설의 정상 가동도 어렵고, 국민들의 ‘인쇄’에 대한 인식도 극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인쇄산업을 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매년 6% 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유망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수출 마케팅에서도 중국 등에 밀리면서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2008년에 발효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구성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폐지안도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쇄를 뺀 출판진흥기구의 설립은 온당치 않다. 또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발효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산업팀의 명칭이 출판인쇄산업과로 변경된 바 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진흥기구의 명칭에 출판만 들어가면 정부 조직의 명칭과도 배치된다.

진흥기구 설립 방향

아무리 출판콘텐츠가 좋아도 그 것을 담아내는 인쇄의 역할과 기술이 뒤떨어지면 출판의 가치를 높이기 어렵다. 인쇄문화의 발전 없이 출판과 잡지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상업용 인쇄물의 수출도 치열해 지는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공산품 등 각종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인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수출전위산업이기도 하다. 비록 국내에서 인쇄기는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인쇄기술 만큼은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업계의 자구노력과 진흥 기구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수출증대는 물론 아시아 인쇄강국으로, 세계 인쇄시장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출판이 발전하면 인쇄는 당연히 발전하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 욕구도 늘어나 책을 많이 사 보게 되니 출판 진흥보다는 나라의 경제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출판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만약 출판 진흥기구만 설립된다면 인쇄 진흥기구도 설립해 달라고 주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출판 진흥기구와 인쇄 진흥기구 모두 설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출판과 인쇄는 함께 가야한다. 어느 한쪽만 발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바늘과 실은 함께 있어야 그 빛을 발한다. 출판과 인쇄를 양대 축으로 하는 진흥기구, 즉 출판인쇄진흥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